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톡톡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소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합니다!



의약품 주입펌프,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개발했어요



기존

- 2010년 세계 최초로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으나, 품목 미신설과 별도 보험급여 기준 미책정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이 곤란했습니다.

개선 안양시의 3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식약처 품목 신설과 의료보험 급여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13조 규모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 치명적 의료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8년 10월)
복지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2019년 8월)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을 마련했어요



기존

- 전북 완주군 소재 P기업은 2015년 지게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선 완주군은 2017년부터, 2년여간의 전문가 자문, 대안제시, 부처협의 등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에 관한 인증 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상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1,932억원)와 일자리 창출(429명)이 예상됩니다.

* 산업부,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국가표준(KSC8569)개정(2019년 6월)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이 빨라졌어요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기존

- 방사선 의료기기는 매년 제품별로 허가를 받아 관련 기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6개월 소요)

개선 대구광역시는 기업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조실 주관 토론회 등을 통해 시험·검사기관별 허가로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기 출시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관련 제품과 기업들의 신속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9년 12월)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드론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요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

기존

-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최소 3일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하여 긴급상황시 즉각적인 드론비행이 어려웠습니다.

*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지표면(건물높이) 150m 이상 등

개선 부산광역시는 국조실·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화재,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 드론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과 드론산업 성장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국토부, 항공안전법시행규칙개정(2018년 11월)

원자력연구원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전용공간을 설정했어요



기존

- 대전 원자력연구원 반경 약19km (사실상 대전 전역)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연구개발과 시제품 성능 시험을 해야 하는 드론 기업들의 지속적인 애로 해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선 대전광역시는 3년여간 국토부 등 12개 기관과 수십 차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전용공간을 설정했습니다. 지역 드론 경쟁력 확보 및 ICT 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합니다.

* 국토부, 대전 드론 공원 공역 개시 허가(2019년 9월) 및 항공정보간행물(AIP) 수록(2019년 11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합니다!



그림자조명, 전통주 관련 규제개선 등 지역발전 기반조성 등을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림자 조명 광고가 기업 활성화의 빛이 됐어요



기존

-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가지 불편과 판로 확대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그림자조명) 지주에 있는 전기를 활용,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투사하여 바닥 등에 광고 문구(공익적 문구)를 야간에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는 기업입장에서 작지만 절박한 규제해소를 위해 국조실 건의, 부처 협의 등의 노력으로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공공목적의 광고물에 대한 그림자 조명이 합법화되어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2019년 7월)

막걸리의 총산도 제한 폐지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어요



기존

- 맥주, 와인은 산도제한이 없으나, 막걸리는 총산도 제한 규정이 있어 산미를 살린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선 울산광역시는 1년여간 지속적 건의 및 노력을 통해 전통주(막걸리)의 총산도 제한이 폐지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2019년 7월)

74개 식품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어요



기존

- 산업단지 내 편입토지 소유자와 기반시설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택지공급 차별, 지원시설 용지 내 공장 입주 불가, 산업시설 내 건축한계선 및 중 대형 필지 구획으로 인한 다양한 기업 유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익산시는 토지소유주 보상에 차별을 해소하고, 산단 개발계획 변경, 건축한계선 변경 소필지화 등 기업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 상시고용 효과 1,500명을 기대합니다.

* 국토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18년 4월),
'국가식품클러스터개발계획변경'(2018년 8월)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기업 고충을 해소했어요



상하수도
요금체계

기존

- 대구혁신도시 의료기업 A업체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 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수년간 적용받아 과다한 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하수도 요금부과 시스템을 정비, 개선해 세금환급을 신속히 조치하고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상·하수도 요금 부과 개선방안 마련(2019년 3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합니다!



의료규제 개선,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심전도 측정,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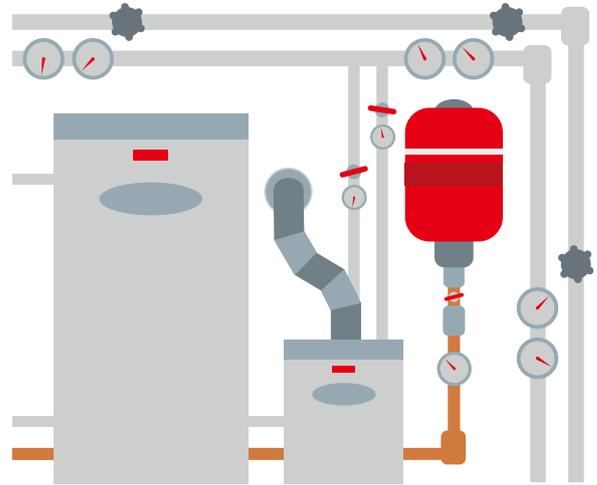
-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경우에도 병원 도착 전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 법에 저촉되었습니다.

개선 부산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9년 소방청 주관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심장병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즉시 시술이 가능해 생존율 향상이 기대됩니다.

* 소방청,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발의(2019년 5월), 소방청 주관 전국적인 시범사업 실시(2019년 12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투자를 추진해요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기존

-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제성 미달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개선 대전광역시는 2017년 도시가스 사업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자 매칭(+50%)을 제도화 하였으며, 이를 반영, 산업부는 「미공급 소외지역」 의무화 제도(사업자재원 매칭제도)를 신설 하여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에 기여하고, 대전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향상됩니다.

* 산업부,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지침」 개정(2018년 8월)

1석 3조로 미집행 공원의 멋진 변신을 기대해요

미집행 공원
해소



기존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는 해제면적의 10~20%에 대해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 하나, 대신 국가회계로 귀속되는 '보전부담금'을 주로 납부하여 공원 녹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경기도는 개선방안을 마련, 2년간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의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미집행공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재정투입 없이 경기도내 145개 공원 조성으로 주민휴식 공간 제공 등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개정('18.4.17.),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및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개정('18.8.10.)

군사보호구역 행정 협약, 군·관·민 협력체계를 구축했어요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군보급

기존

- 고양시의 약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군당국의 일방적 판단으로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40여회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해제 절차가 복잡한 군사보호구역에 군·관·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Q-GIS)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협의 절차가 1개월에서 하루로 단축되었습니다.

* 고양시&60사단 행정위탁협약 체결(2018년 12월), 고양시&11항공단행정위탁협약체결(2019년 1월)

지방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살아납니다.

적극행정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합니다.

지역기업과 주민의 아이디어로 상품 개발, 수출 활성화, 세계화로 나아갑니다.

